

대한민국

82%

의 기업 리더, 운영 전반을 전기화(electrifying)할 경우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의 경우, 경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연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이후 나타난 것과 같은 외부 가격 충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기업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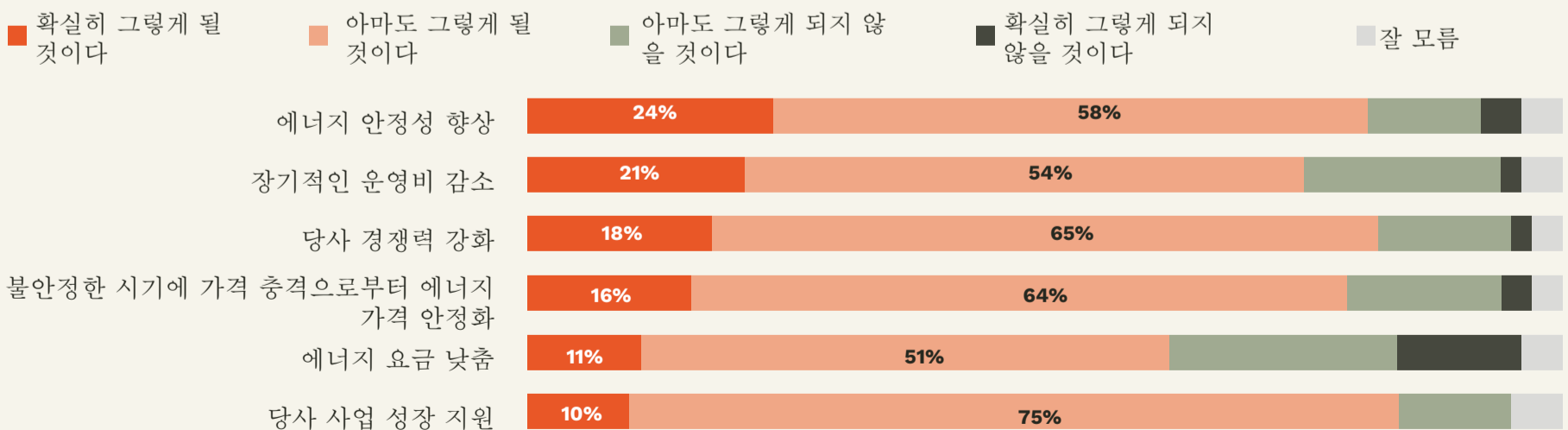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전력을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대와 디지털화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배경

현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탈탄소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청정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안보는 2026년 3월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사태 이후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주요 화석연료 수입국인 한국은 이에 따라 발생한 에너지 가격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업들의 우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상당수는 전기 기반 설비로 전환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로 에너지 안보 강화(46%)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의 에너지 가격 안정성 확보(32%)를 꼽았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산업 경쟁력 강화는 디지털 기술 및 저탄소 솔루션 육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넷제로(net-zero) 산업을 한국의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기업들도 이들 산업이 가지는 이러한 위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대다수가 화석연료 기반 설비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쟁력 강화(82%)와 사업 성장(85%)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리더들, 전기화가 기업 회복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귀사가 화석 연료 구동 장비에서 전기 대체 장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러한 전환이 다음과 같은 결과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기업의 시각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해, 송배전 및 발전 설비가 확대된다면 전력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상당하다는 의미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산업 거점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리더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영진의 39%는 전력망 확대 및 디지털화를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임기 종료 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역시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경영진의 87%는 에너지 시스템이 화석연료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전기요금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 전략에 따라 청정 전기화 (clean electrification)가 첨단·디지털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진 대부분(71%)은 정부가 자사의 전기화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인 낙관론에도 우려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과도 맞물려 있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약 3분의 1(32%)은 사업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44%)가 더욱 명확한 장기 정책 로드맵이 효과적인 정책 지원책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두터운 신뢰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이나 인센티브가 자주 바뀌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경영진 비율은 26%로,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체 평균보다 28%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